

해양경찰의 경비자원 문제와 개선방향

윤성순*

* 한국해양수산개발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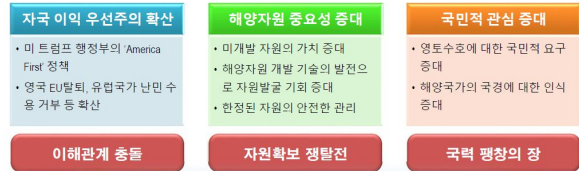
해양환경안전학회 추계학술발표회

해양주권 수호능력 확보 필요

해양경찰의 경비자원 문제와 개선방향

2017. 11. 24(금)

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윤성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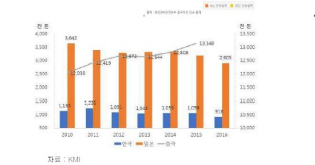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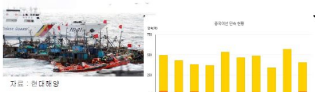


해양을 둘러싼 국가간 충돌 가능성 증대
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힘의 균형 확보 필요

한반도 주변 해양영토관리 동향

■ 해양자원 경쟁

- EEZ 및 NLL 해역의 불법조업 지속(연평균 450건 단속)
- 수산자원 및 영토주권 관리의 요구 증대



■ 점경수역 위협

- 서해5도를 비롯한 남북한 점경수역 긴장 지속
- NLL 침범 등의 상시적 위협



■ 글로벌 해양영토 개척

- 북극해 이용 기회 확대
- 해양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새로운 남진시대 형성



한반도 주변 해양영토관리 동향

■ 중국의 해양경비력 강화

- 해경국 창설 (13)
- “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며, 누가 어떠한 구실을 삼는다면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” (시진핑 17년 신년사)
- 해경 함정의 대형화·무장화
- 자국의 힘을 과시하고 자국령에서의 심리적 억지력 발휘
- 세계 최대 규모의 해경함정 2척 현장 배치
- 해군함정 개조 등 협포 탑재



■ 일본의 해양경비력 강화

- 해상보안체제 강화 관계 각료회의(16.12)에서 ‘해상보안체제에 관한 방침’ 결정
- 5개 해상보안체제 강화 시책 추진
- 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 투입 및 인원 증원



해양경비 태세 현황과 문제

■ 해양경찰청의 해체와 부활을 거치면서 조직적 안정성 훼손과 해양경비력 약화의 우려

- 해양경비 전담조직인 해양경찰청이 해체됨에 따라 해양경비태세의 부실과 외부세력의 오해 유발 우려
- 해양경찰 조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됨에 따라 적극적인 임무수행 환경을 악화

■ 해양경찰청의 해체에 대한 찬반 논란에 불구하고 해양주권 수호의 필요성 제기

- ‘정치적 책임회피를 위한 과잉적 조치’라는 의견과 ‘잘못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징벌적 조치’라는 찬반 논리가 대립
-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누적된 상태였지만, 해양경비력 약화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 발생

■ 해양경찰청 부활을 맞아 해양경비의 새로운 전기 마련 필요

- 불법조업 및 해양경비력 부실화의 우려가 조직 부활의 가장 큰 논리였지만 해양경비를 최우선 임무로 해야 함
- 17년 문재인 대통령은 ‘해경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해상에서의 주권수호를 철저히 할 것’을 강하게 주문

해양경비력 증강 방향

■ 해양경비 전력 증강의 전략적 추진

- 주변 해양 인접국과의 해양경비력의 균형을 유지하고, 단호하고 철저한 경비임무 수행으로 위협세력에게 심리적 억제력 발휘 필요
- 해양경비에 필요한 적정 자원을 확충하고 효율적 운용체계를 마련해야 하며,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조직모형의 개발이 필요

■ 해양경비를 위한 조직과 기능 강화를 추진

- 안정된 해양경비 임무수행을 위해 ‘해양경찰조직법’ 제정의 공론화와 추진의 검토
- 타국의 해양경비세력과의 무발전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 개발 필요
- 함정에 해양조사장비를 탑재하여 해양정보 획득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
- 해양경비를 가장 우선하는 조직으로의 재편

■ 해양경비 자원 확충과 운용 효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의 추진 필요

- 경비자원의 첨단화·현대화를 추진하여 ‘양적 확보보다 질적 개선’을 달성함으로써 주변국 세력과 대등한 수준 유지
- 함정과 항공기의 해군의 입체적 작전수행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항공자산의 추가 확보와 정보통신체계를 확대
- 자연환경과 임무환경의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함정 모형을 개발, 투입하고 자원의 효율적 운용 체계를 수립
- 함정 정비와 같은 외부 전문자원 활용이 유리한 분야를 아웃소싱함으로써 해양경비를 비롯한 핵심임무 수행에 역량을 집중